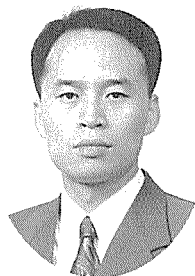


석유산업 지오희의 제조명



장 용 호

〈 SK(주) 업무팀 과장 〉

1. 한해의 조망

신년하례, 새해에 대한 설제로 따뜻하고 평온하게 한해를 열었던 여느때와 달리, 올해의 석유업계는 전년의 IMF 구제금융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당혹감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였다.

우선, BIS비율 달성에 목숨을 건 시중은행의 원유수입 신용장(L/C) 개설 기피, 둘째, 국내 금융시장 상황 악화 및 기업들의 연쇄도산에 겁을 먹은 외국은행의 정유사에 대한 Credit Line 동결, 셋째, 환율폭동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환차손 발생, 넷째, 국민들의 석유류 소비감축에 따른 업계 전반의 경영악화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석유업계를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신속한 정부의 지원,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업계의 노력, 환율안정 등 외부상황의 호전 등으로 점차 급한 불은 끄게 되었지만, 그 상흔은 올 한해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은 석유업계에 계속 어두운 잔영을 드리울 것

같다.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 및 석유업계는 석유산업발전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것은 국내 석유 소비구조를 한단계 진전시킨 등유규격 이원화(실내등유,보일러등유로 이원화)의 시행을 마침내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 수급이 Tight해질 때마다 「왜 그 투명하고 성상이 뛰어난 원유의 엑기스 Kerosene을 옥외 보일러에 사용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의 석유소비구조에 대하여 은근히 비난을 가하던 해외 석유업계에, 한국의 석유산업, 석유정책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쾌거였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많은 변화, 많은 사건이 있었던 한해였지만, 이제 조용히 돌이켜본다.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은, 이제 우리 석유업계의 지속적인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올 한해가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 또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두서없이 몇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98년의 고통과 과제들

3회에 걸친 교통세 인상 유감

올 한해에는 IMF체제하에 놓인 한국의 재정부문을 자량이나 하듯 3회에 걸쳐서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가 인상 조정되었다. 매년 정부는 「①세수부족 보전, ②에너지소비절약 유도, ③대도시 교통난 해소 및 대기오염을 축소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인상조정」한다고 하였다.(표-1 참조)

〈표-1〉 휘발유, 경유 교통세 인상 추이('98)

(단위 : ₩/ℓ)

	종전	1998.1.9		1998.5.3		1998.9.17		인상 합계	
		인상액		인상액		인상액			
휘발유	교통세	414	455	41	591	136	691	100	277
	교육세	62.10	68.25	6.15	88.65	20.40	103.65	15.00	41.55
	부가세	47.61	52.33	4.72	67.97	15.64	79.47	11.50	31.86
	세금계	523.71	575.58	51.87	747.62	172.04	874.12	126.50	350.41
경유	교통세	48	85	37	110	25	160	50	112
	교육세	7.20	12.75	5.55	16.50	3.75	24.00	7.50	16.8
	부가세	5.52	9.78	4.26	12.65	2.87	18.40	5.75	12.88
	세금계	60.72	107.53	46.81	139.15	31.62	202.40	63.25	141.68

〈자료〉 재정부 보도자료로부터 작성

IMF체제하에 긴급 실업대책자금 및 구조조정 지원자금 확충 등 폭증하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따른 정부의 고통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긴급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세 등의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에 먼저 눈이 돌려지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정부가 밝힌 교통세 인상 필요사유인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해서 살펴보자.

실제로 새해부터 외환위기에 따른 소득감소효과 및 1차 교통세 인상(98. 1. 9.)으로 인한 휘발유가격 인상이

로 휘발유는 약 25% 감소하고 있었고, 연간에 걸쳐 약 15%의 감소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요불급한 휘발유 소비는 이미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감소효과에 의해 상당폭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세 인상으로, 필수불가결한 기업활동과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에너지 소비절약과 전혀 무관한 추가 조세부담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조세정책 시행에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의 역진기능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도시 교통난 해소 목적이라는 논리도, 상대적으로 교통혼잡도가 낮은 농촌이라든지 중소도시 소비자들의 교통세 추가부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남겼다.

무릇, 정부 조세정책의 근간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근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조세의 누진기능이 분명해야 하고, 각 경제주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파생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올해의 교통세 인상은 조세정책의 근간이 무시된 채 시행되었다는 느낌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하에 간접세수 위주의 편의주의적 조세부와 체계로부터 탈피하여, 향후에는 직접세 세원확보에 진력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업자중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 과세특례자가 2/3('9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그의 상당수도 간이과세자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조세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현재 제대로 포착되고 있지 않는 세원 발굴을 위하여, 정부는 제도개선 등 단/장기적인 제반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업계의 위기요인으로 부각한 급격한 수요감소

외환위기는 정부, 기업, 국민들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부담을 안겨 주었다. 특히, 대규모 투자자금을 소요

하여 제반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정유산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득 감소로 인한 석유류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석유수요 증가 및 석유 수요 구조의 변화(경질화, 저유황화)에 대응하여 정유사에 정제시설 신증설을 독려하여 왔다. 정유사는 이에 부응하여 대규모 투자자금을 투입하며 시설 신증설(상업정유시설, 고도화시설 등)에 진력하여 왔다. 그러나, 시설 신증설을 완료하고 힘찬 성장가동에 부풀어 있던 정유업계에는 외환위기는 어마어마한 방해꾼이 도사리고 있었다.

올해 약 20%에 해당하는 급격한 수요의 감소, 게다가 2004~5년이 되어야 비로소 '97년 소비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정유업계에게는 비상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표-2 참조) 게다가, 우리의 주요 수출상대국들이었던 동남아국들마저 외환위기에 한국 이상으로 Knock Down 되어 있어, 국제 Refining margin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다. 이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투자비 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이 경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은 전혀 개선될 수 없는 것이다.

〈표-2〉 국내 석유소비 실적 및 전망

(단위: 천B/D, %)

	1997(실적)	1998(추정)	1999	2000	2005
소비량	2,202	1,766	1,878	1,970	2,322
연평균 증가율	-	△19.8	△7.7	△3.6	0.6

〈자료〉 추정 및 전망은 SK(주) 자료임.

이렇게 되면 정유사의 막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고정비 회수는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 및 정유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가격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정유사의 적정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게 되지만, 수요가 감소할 경우 정유사 적정원가를 제대로 반영할 항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의 석유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정유사의 경영악화는 심화되어갈 것임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해를 앞두고 석유업계의 경영 악화가 발생/심화되기 전에, 정부 및 석유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축된 수출시장 및 국제 Refining Margin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는 적정 가동을 검토 등 제반 공동 대책방안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등유규격 이원화의 정착 시급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Kerosene은 원유로부터 증류되어 나오는 유분중 가장 맑고 투명한 유분이다. 물론 가스, 경유, 잔사유분들이 각각 특유의 성상을 갖고 자기 역할을 다하지만, 특히 Kerosene은 우리에게 옛날 「석유」라는 이름으로 전등 대신 밤을 밝혀 주었고 또 주로 항공유, 석유화학공업 원료(Normal Paraffin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고급제품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긴박하여 전운이 감돌던 90년 하반기, 군사활동(주로 전투기 등 항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등유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있었다.

그때 필자의 상사로 계시던 임원 한분께서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투명한 소주를 작은 소숫잔이 아닌 큰 Glass에 부으시면서 『우리는 귀한 등유를 이렇게 마구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며 개탄을 하시던 것이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또, 필자가 일본 연수시절 일본인, 일본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일본은 실내에서 Fan Heater를 쓰기 때문에 등유를 사용한다. 그런데, 한국은 옥외 보일러로 난방을 하면서 왜 등유를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당혹해 한 적이 많다. 물론 일본도 동남아의 저유황 원유를 증류해서 경질유분을 생산하지 않고, 원유 그대로 발전원료로 사용(生焚)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석유업계는 약 1년여에 걸친 연구/검토를 거쳐, 마침내 '98. 8. 1. 등유규격 이원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내 등유를, 옥외 난방기구 사용시에는 보일러 등유를 사용토록 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등유규격 이원화는 아직 미완의 대기업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호 대체가능 유종인 실내등유 - 보일러등유, 보일러등유 - 경유간의 가격차가 왜곡되어 있어 보일러등유의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석유업계, 전문가, 소비자 설문 등을 참고로 신규유종의 가격체계 수립시, 실내등유 및 보일러등유 양유종간 약 100 W/L 전후의 가격차(실내등유 > 보일러등유)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또, 경유소비자(운송업자 등)의 보일러등유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유종간의 가격차는 최대한으로 줄여 약 50 W/L의 가격차(보일러등유 < 경유)가 시현되도록 가격체계를 수립/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상기 유종간 가격차는 실내등유 - 보일러등유 약 50 W/L 이하, 보일러등유 - 경유는 약 120 W/L 이상의 형태로 왜곡 운영되고 있어, 보일러등유의 소비유도 및 보일러등유 전용방지 정책에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등유규격 이원화에 대한 도입취지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가격체계 등에 대한 합일점을 찾아 보일러등유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대외개방과 신규 수입업자의 대두에 대한 일고

외자유치 촉진 및 수출증대가 신정부의 2대 역점과제로 천명됨에 따라, 정부는 석유산업에 있어서의 외자진입에 대한 규제를 '99. 1월 예정에서 주유소운영업의 경우 '98. 5. 8., 정제업의 경우 '98.10. 1. 서둘러 폐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 연구소 등과 함께 대외개방대

책반을 구성하여 개방 이후 석유산업의 변화 및 영향 전망, 대응방안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수급상황, 경제성 등을 고려해볼 때, 정제업에 대한 외자의 신규참입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반면 현 정유사에 대한 지분투자 형태의 진입은 상당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주유소운영업의 경우 해외 메이저등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고, 또 대형 외자계 할인점들의 주유소 병설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최근 석유업계에 대한 외자참입 등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 개방화,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국내 신규 석유수입업자의 대두도 올해의 석유업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제 국내 석유공급은 그동안의 정유사들이 전적으로 1차적 공급책임을 다하던 체제로부터 석유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석유수급을 책임지는 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석유의 물류흐름상, 석유수입업자는 국내 석유류의 1차적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허부 석유유통부문이 아무리 안정되고 체계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1차적 공급이 불안정하면 석유수급에 혼란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신규 석유수입업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신규 수입업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비정기적으로 불안정하게 석유수입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는 바로 정유사의 Opera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내 석유수급에 혼란을 불러 올 것이다.

흔히, 우리는 수입업자들이 저가의 해외제품을 수입하여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자유화와 경쟁의 아름다운 결과라고들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 석유시장의 행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석유제품에 있어서 과연 이 논리는 타당한 것인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들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하여 수입공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국제 석유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일정량의 저렴한 석유제품을 구득/공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싼 가격으로 일정물량에 대한 장기 안정적 1차 공급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일시적인 수입행위가 국내 석유시장을 혼란시키고 수급안정 기반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석유수입업자들이 정유사들과 1차적 석유공급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안정적 영업활동 유도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률/제도적으로 그들에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유업체와 동등한 가격/수급안정, 품질 등의 의무와 권리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소비자들은 국내 정유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의 제반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며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입업자 또는 신규진입자들이 석유산업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가격/수급안정에 대한 소명감을 갖고 국내 1차공급자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석유산업 자율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한해는 석유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정부, 업계, 소비자에게 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던 것 같다. 그 많은 화두에 대해서는 각각 다양한 논의·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석유산업 자율화 라는 화두에 대해서 정부, 업계, 소비자가 공통의 인식을 만들어 가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

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제대로 된 인식 없이는, 끊임없이 대두되는 새로운 환경변화/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의 혼란과 오류, 여론의 석유산업 정책/업계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석유산업자율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되어야 할까? 필자는 지난 「석유협회보」(’98.9·10월호)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복재박사께서 밝힌 석유산업 자율화의 의미로부터 공통 인식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 『석유산업의 자율화는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합리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며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는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석유의 공급체계를 보다 강화시켜서 안정적(가격과 품질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광의의 안정성을 의미함)인 공급을 확보한 바탕 위에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 석유산업 자율화의 근본 목적이 있다. 또한, 자유방임이 아닌 자율화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다. 이제 한해를 접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개방화, 자유화시대에는 그 동안의 정부가 관리하던 사항은 모든 것이 규제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단순논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가격/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라는 말이 고루한 보수주의자의 목소리로 치부되어서는 아니된다.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반면, 자유화, 개방화시대라 할지라도, 정부가 시장 감시자, 보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요 제도는 반드시 존치하고, 신규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제도는 과감히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

또한, 업계는 자신의 경쟁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의 「공급체계 안정 등 석유산업 정책」에 기존 업계, 신규진입자 할 것 없이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즉, 석유산업 참가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질서 속에서, 석유산업 자율화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